

教授參與의 방향과 한계

張乙炳
(成均館大 政治外交學科)

1. 大學의 理念

대학의 이념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탐구가 대학 본연의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교수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를 달리 표현하면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진리 탐구를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제 아무리 건물이 크고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의미의 대학일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이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겠다.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대학의 분위기란 바로自律性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리란 타율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사고를 통해서 탐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스페스의 말대로, “자유로운 사고와 가치 판단이 금지되면 소극적인 무관심이 자라나거나 안이한 태성에 젖어든다”고 하겠다. 이렇듯 소극적인 무관심과 안이한 태성에 젖어들 때, 적극적인 진리 탐구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고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 수 있게 만들 때, 진리 탐구의 전당으로 자임할 수 있다.

흔히들 대학을 가리켜 ‘知性의 殿堂’이라고 일컫고 있다. 여기서 지성이라고 함은 단편적인 지식과는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지식이 지성을 갖추는 필요한 요건이긴 하더라도, 지식이 곧 지성일 수는 없다. 지식은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지혜라고 하면, 지성은 현실을 비판하고 세로움을 창조하려는 혁신적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흡스 테너는 지식과 지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식은 극히 좁고 즉각적이며 可視의 인 한계 안에서 활용되는 정신의 탁월함이다. 지식은 조작적이고 조정적이며, 어김 없는 실용적인 자질이다. 지식은 제한된, 그러나 명백히 선고된 목표의 구도 안에서 작용하며,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회의적인 사고를 재빨리 패기쳐 버린다. 반면에 지성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며 정신의 명상적인 측면이다. 지식이 포착하고 조작하며 재정리하고 재조정한다면, 지성은 음미하고 사색하며 회의하고 논리화하여 비판하고 상상한다. 지식은 상황 안에서 즉각적인 의미를 포착하고 그것을 평가한다면, 지성은 평가를 평가하고 전체로서의 상황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식은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지적 기능이라고 하면, 지성은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지적 기능이라고 하겠다. 지식은 현실 적응 내지 현실 안주의 성향을 지니는데 반해, 지성은 현실 비판 내지 현실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지식과 지성 중 대학이 보다 추구해야 할 것은 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지성을 추구하고 있기에 비판과 창조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을 사회나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대학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대학이 현실 비판 내지 현실 개혁의 뜻을 지닌 지성을 탐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발전은 현실 적응 내지 현실 안주의 사고 속에서는 결코胚胎될 수 없다. 현실 적응 내지 현실 안주의 사고 속에서는 보수적인 체질이 길러질 따름이다. 발전은 현실 비판 내지 현실 개혁의 의지 속에서만 기대되고 추구될 수 있다. 발전은 현실 비판과 현실 개혁의 결과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발전이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만 발전이 이룩됨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사회나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전당’으로서보다는 ‘지성의 전당’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대학이 ‘지성의 전당’으로 될 때, 그것은 사회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대학이 ‘지성의 전당’으로서 주어진 본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학이 외적인 압력이나 타율적인 명령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대학은 국가 안에서 존립하고 있는 어떤 기구나 조직들보다도 자율성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이 대학다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소임이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려 하므로 현실과는 긴장 관계에 설 수밖에 없다. 또 대학이 자율적인 입장에서 현실과 긴장 관계에 서는 것이 사회나 국가에 이바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우리네 대학은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방기하도록 강요받아 왔고, 한치의 자율성도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

려 대학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 속에서 안주하도록 강요받아 왔고, 엄격한 타율적 지배 속에서 살아 왔다. 타율적 지배 속에서 지내온 대학이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지 못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논의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 教授의 自律과 參與

1986년 5월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대학의 학생회로부터 강연을 부탁받고 그 대학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교문을 들어서 교정을 걸어가다 보니, 여러 개의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 중 하나가 유독 필자의 시각 속으로 잡혀 들어와서 자세히 살펴 보았더니, ‘정부 당국과 학생들 사이에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터한 내용을 읽어 본 순간 필자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학생들로부터 이러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교수란 직업이 처참하게 느껴졌고, 이렇듯 수모를 받는 교수가 하는 수업이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교수의 자율권만은 회복시켜야 할 터인데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주의적이고 비굴했던 교수들이라, 당연히 받아야 할 수모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1970~1980년대 어려웠던 시기에 그나마 학생들은 부당한 권력에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해 왔는데, 교수들은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그것에 항거하기는 고사하고, 그 편 아니면 그 명령에 따라 학생들을 제재하고 나섰던 것이다. 부당한 권력을 방관한 것도 역사의 죄악인데 그 편에 섰으니, 어떠한 수모를 당한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대로, 이렇듯 어려웠던 시기에 교수들의 일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교수의 자율권이 결실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있었을 때, 권력이나 학교 당국의 성화에 못이겨 시위

현장에 나왔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교수들은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대학이 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자율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기에 이르렀다.

교수들 속에서도 대학 자율성이 확산되어 가고 있던 시기인 1985년 여름에 정부 당국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學園安定法案’을 들고 나왔다. 당시 일부 교수들은 학원안정법안을 ‘학원에 대한 긴급조치’로 간주하고, 그 제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뒤이어 1986년의 봄과 1987년의 봄에 있었던 교수들의 시국에 관한 성명에서는 하나같이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학원의 자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학원의 자율화는 학생 활동의 자율권과 교수의 자율권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생 활동의 자율권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목숨을 전 투쟁의 결과로 실질상으로는 용인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지난 6월 전후의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원의 자율화란 교수의 자율권 회복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학생 활동의 자율권은 제도상으로 事後承認의 절차를 밟고 있을 따름이고, 교수의 자율권이 학원의 자율화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요소가 학생과 교수와 학교 당국이라고 할 때, 교수의 자율권은 대학의 자율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수의 자율권이 보장될 때, 학생 활동의 자율권은 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될 수 있고, 타율성에 길들여진 학교 당국의 자율화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수의 자율권은 학생 활동의 자율화를 올바로 이끌어 가고 학교 당국의 자율화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의 자율화, 특히 교수의 자율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 중에는 교수 제임명제의

폐지, 국립대학 총·학장의 교수 추천제의 부활, 사립대학 총·학장의 문교부 승인제의 폐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교수의 자율권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구되고 있는 것은 教授協議會의 부활이라고 하겠다. 대학마다 고유의 전통과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러한 전통과 특성을 살리다 보니 대학마다 구성되는 교수협의회의 형체와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지만, 교수협의회의 기본적인 성격은 대체로 대학 운영의 민주화와 교수의 권익옹호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고로 한두 대학의 교수협의회 구성 목적을 살펴 보면, “교수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 대학교 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교수가 대학 운영에 자율적·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학 민주화의 실현과 교수의 권리 옹호를 기하고 대학의 발전과 대학교육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교수협의회는 대학 운영에 참여하여 대학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교수의 권리 옹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단순히 존립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교수의 권리 옹호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뜻이 있다. 지난 날 부당한 권력하에서 연명해 왔던 교수협의회를 형식상 부활하는 데 그치거나 남들이 구성한다 하니 형체나 갖추자는 식의 교수협의회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행정부에 협찬하는 국회가 무의미하듯, 학교 당국에 협조하기 위한 교수협의회라면 뜻이 없다. 학교 당국의 학사 운영을 비판·감시하고, 종국적으로는 교수의 의견에 따라 학사가 운영되도록 만드는 데 교수협의회의 존립의 뜻이 있다.

따라서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자발적·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외부의 힘에 의한 간섭 없이 교수들의 의사에 따라 중요한 학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의 간섭이나 학교 당국의 조종하

에 움직이는 교수협의회라면, 그것은 기존의 교수회와 다를 바 없어서 존립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만다.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주어진 소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명목상 존립해 왔던 제도나 조직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劇員됨으로써 빛어냈던 처참한 현상들에 대해 우리는 더없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교수협의회는 권력이나 학교 당국에 의해서 동원되는 교수들의 모임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의 협의체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협의회는 단순한 존립에 뜻을 두고 있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학의 민주화와 학사 운영의 합리화와 교수의 권익 증진에 보탬이 되는 살아 움직이는 기구여야 하리라고 믿는다.

3. 教授 參與의 限界

앞서 대학의 구성 요소들은 학생·교수·학교 당국 등이라고 했다. 이렇듯 대학의 구성 요소들이 셋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들 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대학의 구성 요소들 중 교수가 핵심적인 요소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렇다고 교수만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학의 다른 구성 요소인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따로 있고, 역시 학교 당국이 감당해야 할 기능이 또한 있다. 따라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수들의 참여와 역할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평소 필자는 대학생들의 학습의 통로를 셋으로 나누어 보아왔고, 그 중요성도 균등한 것으로 여겨왔다. 대학생들이 지성을 연마하는 통로의 첫째는 말할 나위 없이 교수에 의한 수업이고, 그 둘째는 학생들 스스로의 자습이며, 그 세째는 대학이라는 분위기라고 필자는 보았고, 이러한 세 가지 통로가 각기 3분의 1의 비중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왔다. 이렇듯 대학에 있어서 다하는 교수의 역할이 대충 3분의 1에 해

당된다면,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수의 참여나 역할도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에 있어서 교수들이 다하는 역할을 3분의 1로 한정지운 것은 필자의 자의적인 결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평년 대학에 있어서 교수들의 역할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중의 배분은 설사 재조정한다 하더라도, 대학에 있어서 교수들의 역할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수들의 참여와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학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네 대학들도 웬만하면 몇 만 명을 수용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고, 그 내부의 기능들도 복잡 다가하고 얹히고 설켜 있다. 마치 기업이 대규모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 경영진이 필요하듯이, 대학도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진이 필요한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다가 교수들이란 스스로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조직체나 제도의 운영에는 거의 무능력자라고 일컬어질 지경이다. 오히려 조직체나 제도의 운영에 무관심하고,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교수다운 교수로 추앙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학 운영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요청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들의 무관심 내지 무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교수들의 참여와 역할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수들의 참여와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수들의 참여와 역할은 중요한 학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교수들이 설정한 기본 방향에 따라 학사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감시·비판하는 데 머물러야 할 것 같다. 교수들이나 그들의 협의체인 교수협의

회가 학사 행정의 사소하고 기술적인 문제에까지 간섭하고 나오면, 그것은 오히려 원활한 학사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수들의 참여와 역할 내지 교수협의회의 기능은 중요한 학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머물러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 내지 제적과 복학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을 도맡을 총·학장의 추천 아니면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

항, 예산과 결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학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만 머물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교수들과 협의회는 이러한 학사의 기본 방향이 성실히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데 그쳐야 할 것 같다. 모름지기 대학 운영에 사사건건 간여하고 간섭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 같다. 바로 여기에 교수의 참여와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大學教授招聘情報室 등록 안내>

大學教授가 되고자 희망하는 고급 인력에 관한 情報와 資料를 확보하여 專任教授를 초빙하려는 會員大學에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협의회 大學教授招聘情報室은 아래와 같이 대학 교수 희망자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 登錄對象

전국 4년제 대학 專任講師 이상의 教授資格要件을 구비하신 분(단, 회원 대학의 現職教授는 제외됨)

2. 登錄方法

본 협의회의 소정 양식 '教授資源人事記錄카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3. 登錄時期

年中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接受處

① 5 ②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5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 대학교수초빙정보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783-3065, 3067, 3068, 3891)